

<바른사회 긴급좌담회>

한미FTA 개정 협상, 과연 실리 얻었나

- 일 시 : 2018년 4월 2일(월) 오후 3시30분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순 서 —————■

■ 사 회

- 최 병 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패 널

- 정 인 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김 영 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김 원 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오 정 근 (건국대 금융IT공학과 특임교수)

■ 질의·응답

■ 폐 회



■————— 목 차 —————■

■ 좌 답

한미FTA 개정협상: 어떻게 봐야 하나?	7
- 최 병 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미 통상협상 평가	9
- 정 인 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한미FTA 개정 협상, 과연 실리 얻었나	11
- 김 영 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한미 FTA 협상: 제약분야	15
- 김 원 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한미환율협상의 파장	17
- 오 정 근 (건국대 금융IT공학과 특임교수)	



[좌 답 1]

한미 FTA 개정 협상: 어떻게 봐야 하나?

최 병 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협상결과 평가

한국정부는 미국과 한미FTA 개정협상에 원칙적으로 타결했다면서 지난주 합의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에겐 명분만 주고 한국은 실리를 취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철강 25% 관세를 피하고자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

철강관세를 완전히 약속 받은 것도 아니고 74% 물량까지만 무관세를 약속 받았다. WTO 규범과 어긋나는 자율적 수출규제에 합의한 것이다. 이미 80% 이상의 철강수출에 적용되고 있었던 미국의 반덤핑조치 등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픽업트럭 관세 25%를 2021년에 무관세가 되는 상황은 전세계 어떤 국가도 받아내지 못한 합의였는데, 이를 20년 후로 연장 했다면 수출기회는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세금 들어 일자리 창출에 여념 없는 정부가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일자리 창출 기회를 건어찬 것이다.

협상과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끌려 다닌 협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짜놓은 판에 한국 정부가 완전히 휘말렸다. 철강 관세는 원래 없던 것인데 FTA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미국이 던진 것 아닌가. 한국은 관세 면제 이외에 무언가를 얻어냈어야 FTA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없는 듯하다.

양보한 것이 적다는 구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축소와 은폐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철강 하나만 놓고도 이런 협상을 했다면 앞으로 선박, 항공기, 반도체 등 미국 트럼프 행

정부가 232조 관련 계속 제기할 다른 분야 통상갈등이 불거졌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협상은 상대가 있고 더구나 그 상대가 미국이고, 트럼프이다. 환율관련 합의가 있다는 미국측 주장에 정부는 처음엔 완강히 부인하다, 나중엔 소관부처가 다르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빛 좋은 개살구만 주었다”는 국내용 허장성세는 사실도 아니거니와 트럼프를 자극할 뿐이다. 한국보다 협상력이 강한 상대가 만족하지 않는데 어떻게 협상이 타결될 수 있었던 말인가.

“축구하고 왔는데, 야구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본다”는 변명은 누가 제대로 된 경제통상외교를 이끌고 있는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트럼프는 통상과 안보를 연계하고, 환율까지 연계하여 협상하려 한다. 한국정부가 안보 따로, 통상 따로, 환율 따로 대응한다면 서로간의 연계를 부정한다면, 취약한 협상력을 더 약하게 할 따름이다. 트럼프에게 계속 끌려가지 않고 한국의 핵심이익을 지키려면, 분절화된 경제통상외교를 극복해야 한다.

[좌 답 2]

한미 통상협상 평가

정 인 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미국에 별로 내준 것 없이 철강 관세 적용을 막았고, 농업 개방금지 레드라인을 켜내면서 한미 FTA 폐기를 막았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에게 ‘명분을 주고 [우리나라는] 실리를 챙긴 협상’으로 우리나라 통상당국은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 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미국은 통상전문가들을 실색케하는 자료를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환율 개입금지를 위한 협의(MOU)까지 적고 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을 타결해야 하고, 철강 관세 부과를 면제받아야 하는 상황이 긴박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협상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자세히 살펴보면, 통상당국의 발표에는 미국에 양보한 분야의 파급영향 분석이 미흡했고, 평가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적용기한이 없이 무기한으로 적용되고, 수익성이 높은 유정용 강관은 51% 쿼터밖에 안되며, 쿼터외 물량을 인정하는 ‘저율할당관세(TRQ)’로 대응하지 못했다. 철강 관세를 막았다고 하지만, 글로벌 25% 관세에 비해 나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기존 반덤핑, 상계관세 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앞으로 미국의 무리한 무역구제 제도 남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이번에 철강에 대해 쿼터로 수출을 막고, 앞으로 자동차, 가전,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으로 이어지면 한미 FTA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한미 FTA의 경우, 미국은 최대 관심사항인 자동차 요구사항을 대부분 관철시켰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이 고심해 왔던 픽업트럭 관세 ‘10년 철폐’를 ‘30년 철폐’로 양보하면서 뭘 받아냈는지 알기 어렵다. 자동차 안전기준 예외를 메이커당 2만5천대에서 5만대로 늘리면서 미국 자동차 3사의 쿼터 소진이 미약하므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에도 미국 브랜드가 아니라 미국산 렉서스, 혼다, BMW, 벤츠가 한미 FTA 5만대 쿼터를 채울 수 있음을 걱정하지 않는가?

이행사항으로 간단히 치부하고 있는 혁신적 약가결정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미국산 신약가격을 올려주는 것인데, 의료재정에 미칠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 의료재정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네가티브시스템’을 도입했고, 약값을 상당부분 낮췄다. 이에 미국 제약사들은 끊임없이 이의제기를 해 왔고, 이번에 우리 정부가 약값 결정제도를 개선해 주기로 했지만, 정부에서는 FTA 이행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미국산 신약에만 약값을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결국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약값을 전세계 제약사에게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의료재정의 고갈을 가속화시킬 것이 명백한데,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미국이 농업 추가개방 레드라인, 미국산 부품(national contents) 사용 의무화 및 원산지(자동차 부품)를 막았다고 한다. 미국산 부품(national contents) 사용 의무화는 어떤 FTA에도 없는 사항이므로 미국이 우기기 어려웠다. 그동안 미국이 요청해 왔던 원산지 검증 간소화,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의 표준 인정 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양보한 것과 비교해서 미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 양보를 더 비중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ISDS 역시 미국내에서 개정 요구가 나온 사항이다. 어찌면 우리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자고 할 수도 있다. 아직 문안이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성과로 내세우기에는 시기상조였다.

환율 문제에 대해 부인하던 정부는 기재부 단독 협상으로 발표했다. 환율을 거시경제정책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환율은 무역통상에 핵심부분이 아닌가? 산업부와 통상교섭본부가 국제적 환율 관리 방안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으면서 산업과 통상을 담당하는 부처인가 생각하게 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1985년 플라자합의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던 말인가? 미국이 환율개입금지 메커니즘을 국제적으 도입하려는 이유를 모르고 있던 말인가? FTA 관세철폐보다 몇배 더 큰 파급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설령 기재부의 환율 협상을 몰랐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고, 환율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면서 산업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은 기재부를 성토했어야 했다.

종합하면, 미국과의 협상 및 국내 정책당국간 협력 구도로 보면서 자랑스럽게 발표할 내용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연 실리 얻었나

김 영 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한미 FTA개정협상 평가 >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트럼프행정부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기반한 일방적 보호무역정책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 최근의 한미FTA 개정협상결과는 비록 ‘철강부문에서 미국이 충분히 만족하는 수준인 대미수출 30%감축이라는 쿼터제 합의와 자동차 및 의약품 부문의 미국측 요구 수용’이라는 일방적 양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협상팀은 그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려 노력한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이처럼 한미간 통상협상이 미국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게임이 된 주요한 원인은, 양국의 협상력을 결정하는 Disagreement Payoff(협상결렬시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양국의 정치구조적 특징인 것으로 분석됨.
 - 즉 미국은 협상초기부터 한미FTA폐기를 주장하면서 금번 양국간 협상에서 최대수준의 Disagreement payoff, 즉 협상력에 기반하여 협상에 임한 반면,
 - 한국협상팀은 ‘한미FTA의 폐기는 국가존립의 위기로 연결된다’는 한국내의 맹목적 친미정치세력들의 영향력 하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한미FTA의 폐기는 피해야한다’는 협상목표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협상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양국 협상팀의, 출발부터 비대칭적인 협상력의 결과, 당연히 협상결과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종결되었으나, 더욱 우려되는 상황은 한미FTA의 존속을 신성시하는 한국내 맹목적 친미세력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한국의 환율조작국지정 관련한 협상과 향후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결과와 한미FTA협상을 연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임.
 - 이와 함께 기존에 논의되는 주한미군관련 방위비분담협상과 기존의 전통적인 한미군

사동맹 및 방위협력구조까지 모두 한미FTA와 같은 상업적인 양국간 협상의제와 연계시키는 전략을 확대시키고 있음.

- 즉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비용을 한국정부가 지불할 경우에만 한미동맹을 유효한 것이며, 한국의 비용지불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한미동맹은 하시라도 폐기될 수 있다는 Message를 확대하고 있음.

< 향후 한미 통상마찰 및 국제통상환경전망과 정책대응방향 >

- 오는 11월의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색이 짙어지는 가운데, 트럼프행정부의 골수지지층인 백인블루컬러노동자들과의 결속과 정치적 지지확대를 위하여 더욱 공격적인 보호주의무역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단기적으로 한미FTA를 신성시하는 한국내 맹목적 친미세력을 고려하여, 트럼프행 정부가 한국의 환율조작국지정이슈와 북미회담에서의 한국정부의 역할과 같은 모든 전략적 협상이슈들을 한미FTA와 연계시키려는 전략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지난 10여년의 보수정권을 통해 가장 손쉬운 협상상대로 부각된 한국정부를 상대로 트럼프행정부의 일방적 통상압력을 한미간 방위협력 및 군사동맹관계와도 연계하여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트럼프행정부가 한미간 안보 및 군사협력을 양국간 상업적 협력의 상위개념으로 간주하던 전통적인 기본 틀을 부정하고, 한미간 안보군사협력을 상업적 거래대상으로 간주하는 협상프레임에 대하여, 한국정부 역시 적절한 전략수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한미FTA와 한국의 환율조작국지정이슈와의 연계전략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단순히 두 사안의 연계협상을 부정하는 주장만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상투적인 환율조작국 논의를 제압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즉 자국통화 환율의 절하를 초래하는 모든 인위적 정책개입을 환율조작이라고 보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타당한 만큼, 2008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필두로, 일본, EU에서 시행된 양적완화정책에 의한 각국 통화의 절하추이와 한국의 절하추이를 비교할 경우, 가장 심각한 환율조작국은 미국, 일본, EU순이라는 명백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논리적 대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트럼프행정부가 한국의 방위비분담증액 및 중장기 한미군사동맹이슈와 한미FTA를 연

계하면서 상업적 거래대상으로 간주하는 전략에 대해서, 한국정부만 ‘한미동맹이슈는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사안’이라는 한국 내 맹목적 친미세력의 입장을 답습할 경우, 한미통상협상은 영원한 일방적 양보와 패배로 귀착될 수밖에 없음.

- 즉 트럼프행정부의 한미동맹의 상업화전략에 맞서서, 한국정부 역시, 미국산 무기의 최대구매국가인 한국의 무기구매 과정에서의 전략적 대응 및 동아시아지역안보 및 지역협력구조에서의 유연한 전략적 대응까지 동원하는 전략적 정책대응카드활용이 중장기적인 한국의 협상력 제고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o 가장 궁극적인 통상협상력은 결국 통상협상이 결렬될 경우의 이익(disagreement payoff)을 결정하는 경제력, 즉 우리경제의 기술경쟁력에 의하여 결정됨.

- 따라서 향후 확대될 한미간 통상마찰 및 국제적인 통상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전략은 한국산업의 기술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기술혁신노력을 확대하는 것이며, 통상전문조직과 통상전문가의 양성은 부차적인 사안임.
- 즉 한국산업의 기술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협상전문조직 및 인력은 무용지물인 만큼,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우선적인 정책무게중심이 산업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노력에 주어져야하며, 통상전문조직 및 인력확대는 산업경쟁력제고 노력에 대한 보완적 조치로서 이루어져야함.

[좌 답 4]

한 미 FTA 협상: 제약분야

김 원 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현재 시장 규모에서 2017년 대미의약품 수입액은 8억4천만달러, 수출액은 1억달러 수준으로 큰 격차를 보임. 따라서 우리가 미국시장의 접근도를 개선하는 개정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되기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한미FTA협상이 있는 2012년 이후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가 변경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현재 드러난 미국의 요구는 지난 2016년 7월 발표된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방안’이 미국 계열 기업 등 다국적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임. 이는 미국 의약품의 가격을 인상해달라는 것을 의미함. 미국 수입의약품 가격의 인상은 매출을 줄이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수입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임. 즉, 미국 의약품의 독점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임.
- 이는 우리나라 의약품가격이 건강보험의 실거래가상한제로 사실상 단일가격을 운영하므로 정부만 잘 압박하면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봄.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약가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방안’은 우리나라에서 혁신신약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이는 내국사나 다국적사나 모두에 적용됨. 외국사들이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규제완화 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이는 청년고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봄.
- *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제도는 신약 중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됐거나, 임상 시험을 국내에서 하고 개발 과정에서 국내 인력을 고용하는 등 사회적 기여 효과가 크면 제약사가 건강보험과 소비자로부터 약값을 10%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약 심사 기간 단축 혜택 등이 있음.

[좌 답 5]

한미환율협상의 파장

오 정 근

건국대 금융IT공학과 교수

한미환율협상의 파장
한국 잃어버린 20년 일본 따라가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내용

- 한미환율협상의 내용
- 파장
- 대안

환율협상의 내용

- 한국 경쟁적 절하 위한 외환시장 개입 금지
- 개입 내역 투명성 제고
- 환율정책 포기: 소규모개방경제 불구 재정
통화정책만 의존

경상수지와 환율

- 경상수지=외환보유액 증가+ 원화절상
- 외환시장개입으로 외환보유액 증가 못하면 전부 원화 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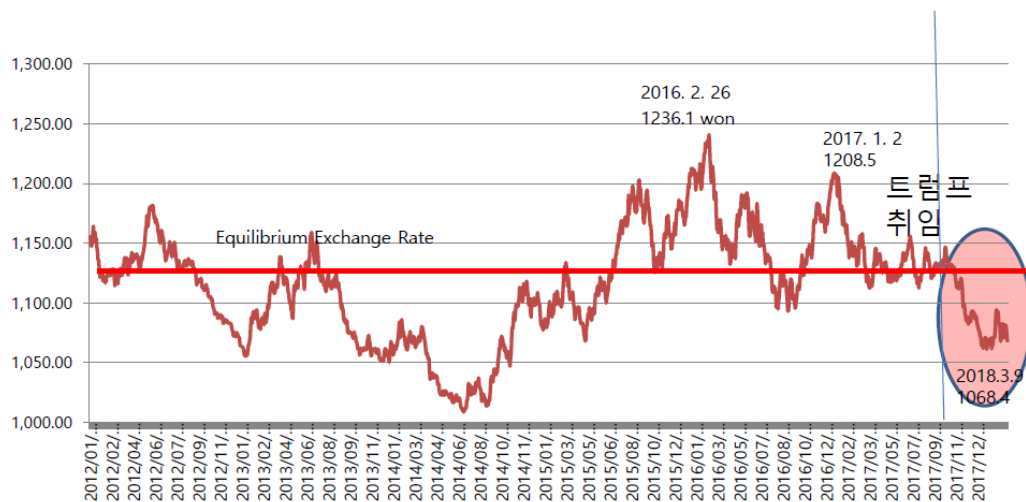
파장1

- 수출입과 경상수지: 환율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 기술우위 시장수요 수출증가 (예: 지난 해 반도체 수출 호조로 다른 수출 부진 불구 경상흑자)
- 불황형 흑자 (경기부진 투자부진으로 수입감소로 수출부진 불구 흑자)
- 이 경우 원화가치 절상으로 다른 수출 초토화

파장 2

- 엔화 절하 원화 절상에 따른 원·엔 환율 하락의 충격
- 한국 수출 초토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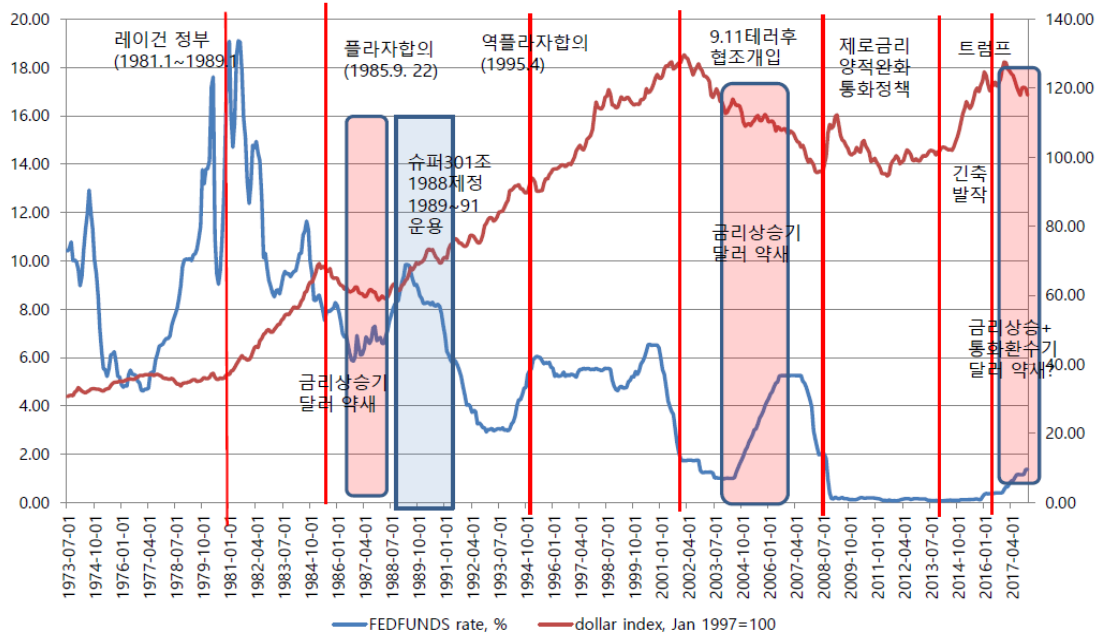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 동향



* Equilibrium Exchange Rate: : John Junggun Oh,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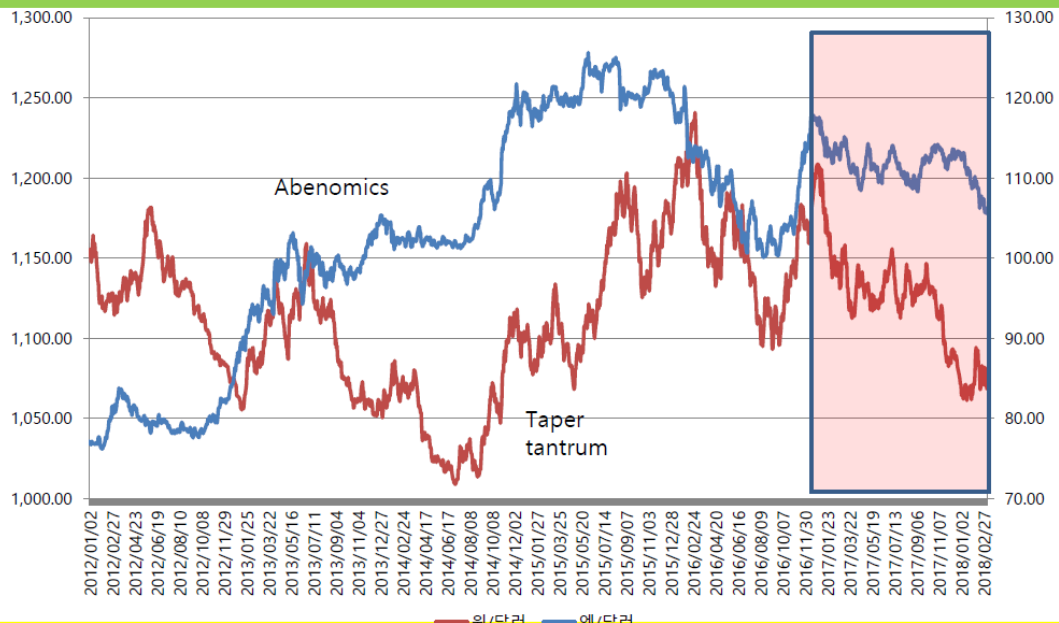
2014년 중반 Bernanke's taper tantrum 이후 상승하던 원/달러 환율이 2017. 1. 2 1208.5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특히 작년 10월 이후 급락,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050원선도 위협

미국 금리와 달러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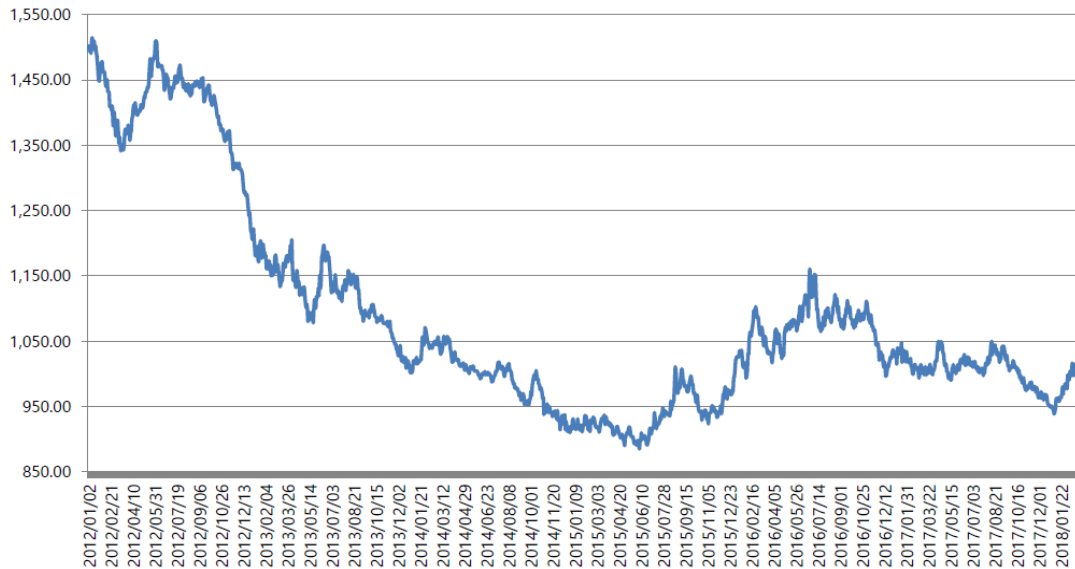
과거 플라자합의 이후, 9.11테러 이후 금리상승기에도 달러가치 하락한 경험
이번에도 금리상승기 달러가치 하락 재연여부 불확실.
이번에는 양적 완화로 풀린 약 4조 달러의 통화환수도 병행되는 시기

원달러와 엔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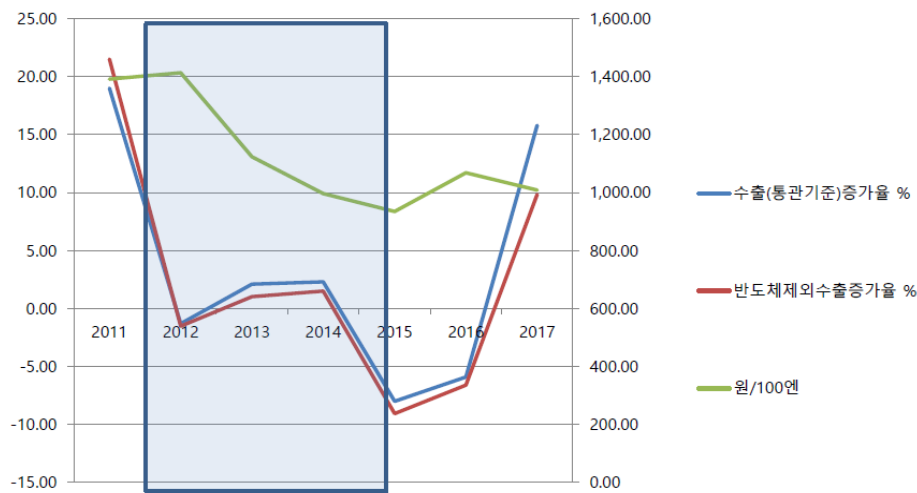
2017년 1월 이후 엔/달러 환율 하락은 제한적인 반면 원/달러만 큰 폭으로 하락.
미일간 한미간 신뢰차이와 한일간 통화정책 차이 영향 반영

원·100엔 환율추이



원/엔 환율은 2015년 중반~2016년 중반을 제외하고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원·100엔 환율과 한국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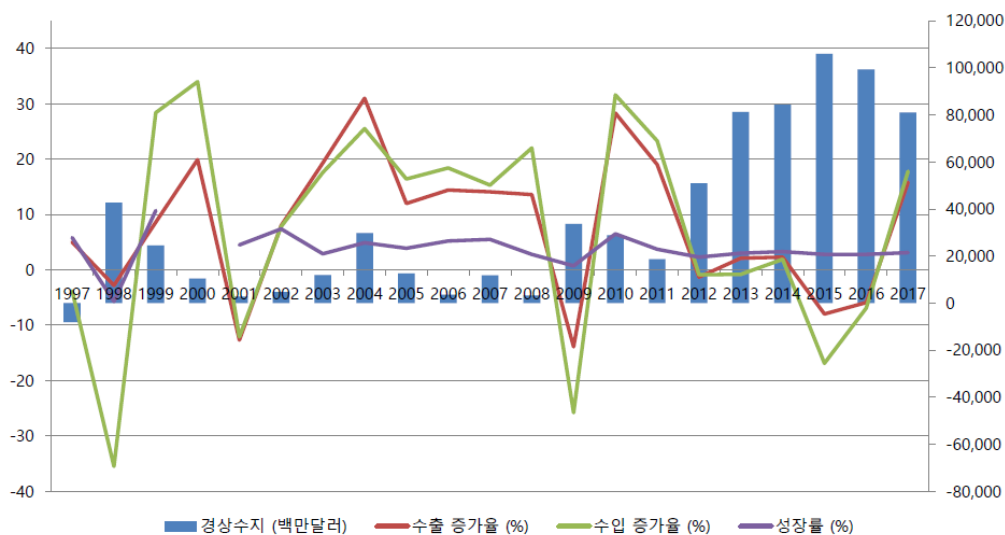
2012년 이후 원/엔 환율 하락기 한국수출 증가율 크게 둔화.
2017년 반도체수출호조와 세계경제회복으로 수출증가율 큰 폭 신장
반도체 LCD 등 수출호조로 전반적인 경기불황 보지 못해 대책 미흡할 수 있는 반도체 착시 우려(1995년에도 같은 현상 발생 후 1997년 위기)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동향

낮은 수출증가 불구 저성장 저투자에 따른 낮은 수입증가로 경상흑자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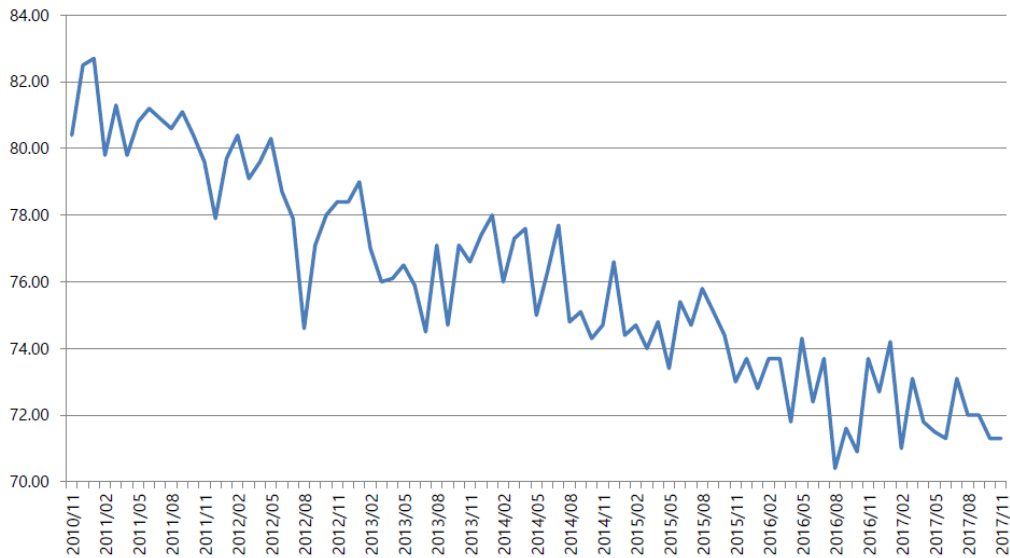
	경상수지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성장률
	(백만달러)	(%)	(%)	(%)
1997	-8,183	5	-3.8	5.8
1998	42,644	-2.8	-35.5	-5.7
1999	24,479	8.6	28.4	10.7
2000	10,444	19.9	34	
2001	2,700	-12.7	-12.1	4.5
2002	4,693	8	7.8	7.4
2003	11,877	19.3	17.6	2.9
2004	29,743	31	25.5	4.9
2005	12,655	12	16.4	3.9
2006	3,569	14.4	18.4	5.2
2007	11,795	14.1	15.3	5.5
2008	3,190	13.6	22	2.8
2009	33,593	-13.9	-25.8	0.7
2010	28,850	28.3	31.6	6.5
2011	18,656	19	23.3	3.7
2012	50,835	-1.3	-0.9	2.3
2013	81,148	2.1	-0.8	3
2014	84,373	2.3	1.90	3.3
2015	105,940	-8.0	-16.90	2.8
2016	99,243	-5.9	-6.90	2.8
2017	81,000	15.8	17.80	3.1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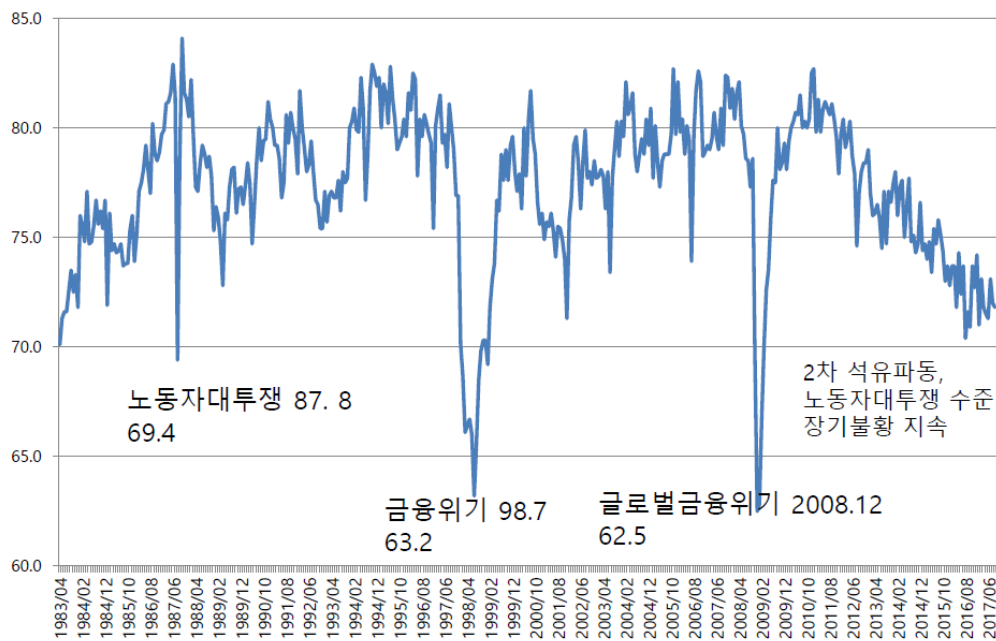
2012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불황형 흑자를 제대로 파악해 대처하지 못할 경우 경기회복시 경상수지 대폭 감소 발생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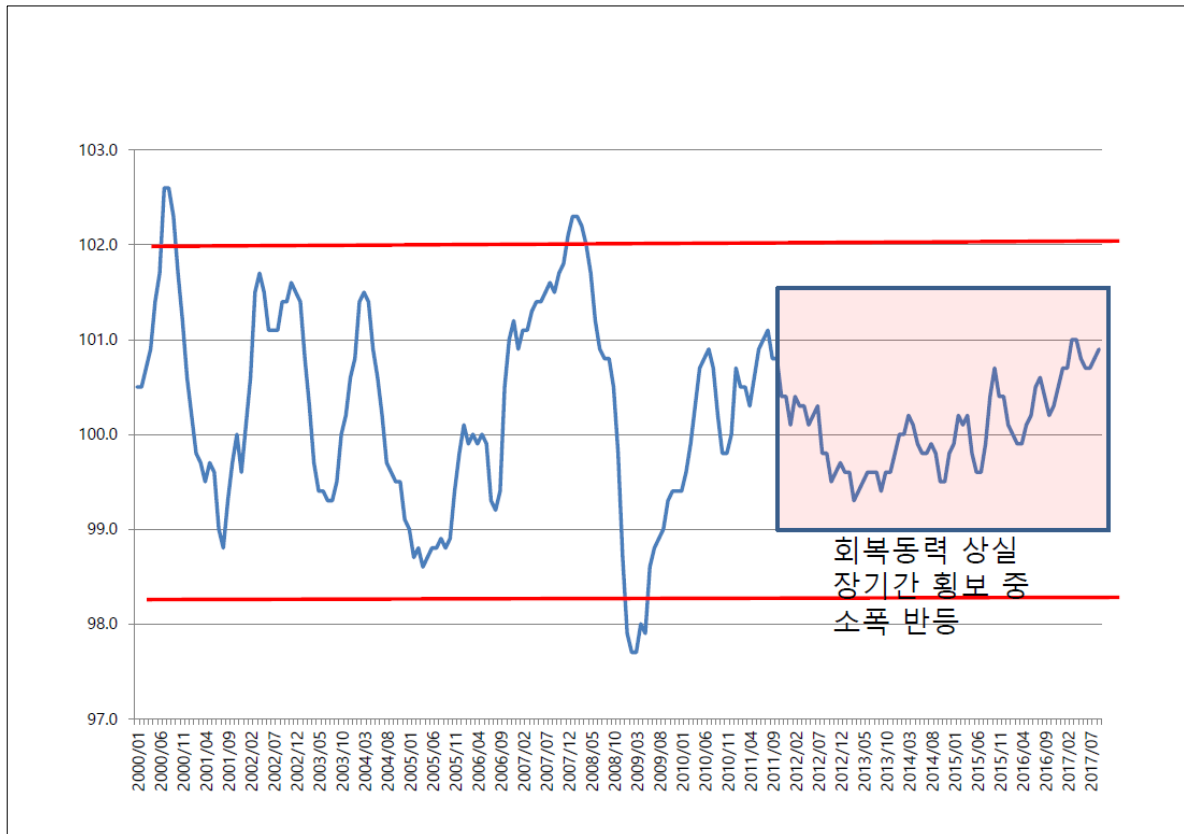
제조업 평균 가동률, %



불황형 흑자와 반도체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평균 가동률은 역대 최저 수준인 71%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대부분 제조업은 장기 불황 지속

제조업 평균 가동률 추이 %





미국의 새 무역촉진법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BHC 법안) 파장 새로운 환율전쟁 시작

- 2015년 미국 상하 양원 통과, 2016년 부터 발효된
새 무역촉진법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일명 Bennet-Hatch_Caper: BHC) 법안
 - 미국 재무부는 연 2회 주요교역국들의 거시경제정책
과 환율정책을 조사 의회에 보고
 - 환율개입 의심국가 통상 투자 제재
 - 1989년 발효된 슈퍼 301조의 환율관련 법안으로 불
황형 흑자에도 불구하고 당시와 같은 보복 우려

미국 재무부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

- 3 기준
 - 대미 흑자 200억 달러 이상
 - 경상수지/GDP 비율 3% 이상
 - 12개월 동안 일방적인 순외환시장 개입 규모/GDP
비율 2% 이상
- 2개 기준 저촉: 관찰/감시대상국 (monitoring list)
- 3개 기준 저촉: 제재대상국

2016년 4월 미국 재무부 주요 교역대상국 1차 환율정책 보고서 5개국 감시대상국 지정

	Bilateral goods trade balance (2015, Bil. \$) (1)	Current Account		Intervention	
		Percent of GDP (2015) (2)	Memo: 3 year change percent of GDP (2a)	Net FX purchases, percent of GDP (3)	Persistent net purchases of foreign currency (3a)
China	365.7	3.1%	0.5%	-3.9%*	N
Germany	74.2	8.5%	1.5%	-	N
Japan	68.6	3.3%	2.3%	0.0%	N
Mexico	58.4	-2.8%	-1.4%	-1.8%	N
Korea	28.3	7.7%	3.5%	0.2%*	N
Italy	27.8	2.2%	2.6%	-	N
India	23.2	-1.1%	3.8%	1.8%	N
France	17.6	-0.2%	1.0%	-	N
Canada	14.9	-3.3%	0.3%	0.0%	N
Taiwan	14.9	14.6%	5.0%	2.4%*	Y
UK	1.5	-5.2%	-1.9%	0.0%	N
Brazil	(4.3)	-3.3%	-0.3%	0.1%	N
Memo: Euro Area	130.2	3.2%	1.9%	0.0%	N

자료: 미국 재무부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 2016. 4. 29

2016년 10월 2차 환율정책 보고서 China, Japan, Korea, Taiwan, Germany, Switzerland 6개국 감시대상국 지정

	Bilateral Goods Deficit (USD Bil., Trailing 4Q) (1)	Current Account Balance		Balance (USD, Billion; Trailing 4Q) (2c)	FX Intervention		
		(% of GDP, 4Q) (2a)	3 Year Change in GDP, Trailing Balance (% of GDP) (2b)		Net FX Purchases (% of GDP) (3a)	Net FX Purchases (\$ Bil.) (3b)	Persistent Net FX Purchases? (3c)
China	356.1	2.4	0.0	260.9	-5.1%	-566	No
Germany	71.1	9.1	2.3	312.3	-	-	No
Japan	67.6	3.7	2.6	158.3	0.0%	0	No
Mexico	62.6	-2.9	-0.8	-31.7	-2.2%	-24	No
Korea	30.2	7.9	2.0	107.1	-1.8%	-24	No
Italy	28.3	2.3	1.9	42.5	-	-	No
India	24.0	-0.8	4.2	-16.0	0.3%	5	No
France	18.0	-0.5	0.4	-12.8	-	-	No
Taiwan	13.6	14.8	5.2	75.8	2.5%	13	Yes
Switzerland	12.9	10.0	-1.6	66.2	9.1%	60	Yes
Canada	11.2	-3.4	0.1	-51.1	0.0%	0	No
United Kingdom	-0.3	-5.7	-2.0	-161.2	0.0%	0	No
Memo : Euro Area	130.5	3.2	1.3	380.4	0.0%	0	No

자료: 미국 재무부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 2016. 10. 14

2017년 4월 1차 환율정책 보고서

China, Japan, Korea, Taiwan, Germany, Switzerland 6개국 감시대상국 지정

	현저한 對美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중요국	'16.10월 보고서 대비
	200억불 초과	GDP 대비 3% 초과	순매수 비중 GDP 2% 초과		
중국	3,470억불	1.8%	△3.9%	1개	동일
일본	689억불	3.8%	0.0	2개	"
독일	649억불	8.3%	-	2개	"
한국	277억불	7.0%	△0.5%	2개	"
대만	133억불	13.4%	1.8%	1개	△1개
스위스	137억불	10.7%	10.0%	2개	동일
멕시코	632억불	△2.7%	△0.5%	1개	동일
이탈리아	285억불	2.8%	-	1개	"
인도	243억불	△0.5%	0.4%	1개	"
프랑스	158억불	△1.2%	-	0개	"
캐나다	112억불	△3.3%	0.0%	0개	"
영국	△11억불	△5.1%	0.0%	0개	"
EURO	1,257억불	3.4%	0.0%	-	-

2017년 10월 환율정책 보고서

< 주요국 평가 >

	현저한 對美 무역흑자 對美 흑자 200억불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 경상흑자/GDP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순매수/GDP 2% 초과	중요국 요건수	'16.10월 보고서 대비
중국	3,570억불	1.3%	△2.7%	1개	동일
일본	690억불	3.7%	0.0%	2개	"
독일	630억불	7.7%	-	2개	"
한국	220억불	5.7%	0.3%	2개	"
스위스	130억불	10.3%	8.7%	2개	"
대만	140억불	12.7%	0.9%	1개	제외
멕시코	690억불	△1.7%	△0.2%	1개	동일
이탈리아	290억불	2.8%	-	1개	"
인도	230억불	△1.3%	1.8%	1개	"
캐나다	190억불	△2.9%	0.0%	0개	"
프랑스	140억불	△1.0%	-	0개	"
영국	△10억불	△5.1%	0.0%	0개	"
브라질	△50억불	△0.7%	2.3%	1개	증가

1) 노란색은 관찰대상국, 2) 요건충족시 빨간색 글씨

◇ 「자료=미국 환율보고서, 기획재정부」

경상수지(불황형)흑자 지속+금융계정 자본유입 지속 불구 미국 환율보고서 등 한국 외환시장개입 어려움으로 유입자본을 보유외환 증가로 연결하지 못하고 원화가치 절상으로 소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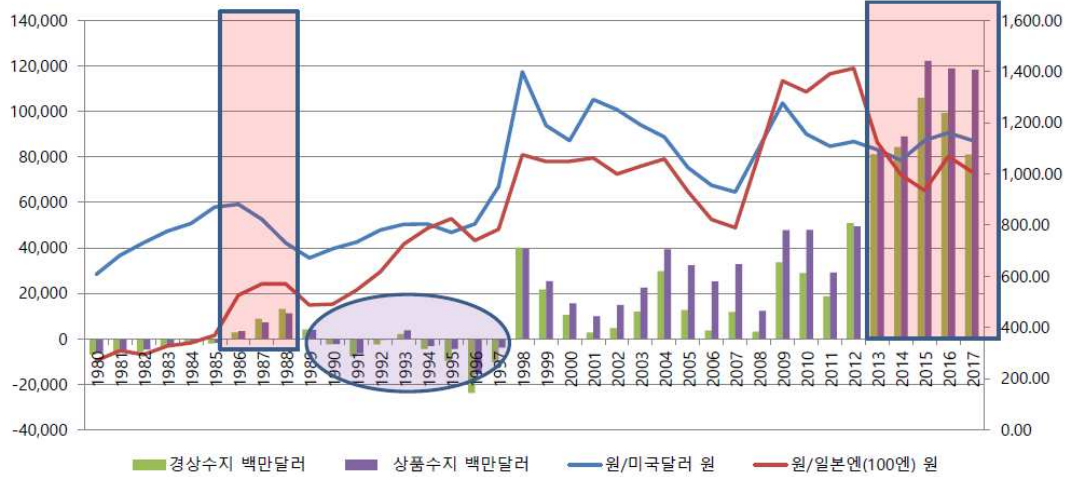
관찰대상국 중 독일은 유로화 강세는 남유럽위기 재발 가능성. 일본은 견고한 미일동맹으로 유화적 태도. 결국 중국 한국만 미국의 공세 대상

신환율전쟁 전망

- 대미 무역흑자 3570억 달러 중국, 690억 달러 일본, 630억 달러 독일에 대한 통화가치 절상 압력 증대 전망
- 유로존 강대국 독일은 유로화 사용으로 절상시 남유럽 타격
- 미국의 아시아맹방 일본은 어느 정도 용인 불가피
- 중국은 미국이 좌지우지 하기 힘들 정도의 큰 국가, 중국산 가격상승은 미국국민들의 생계비 증가요인
- **한국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희생양**
 - 중국 위안화 절상 압력시 한국도 유탄 가능성. 중국 위안화 절상 압력에 따른 수출 둔화 한국간접 타격 불가피
 - K D I: 위안화 10% 절상시 한국성장 0.4% 하락

이런 중에 원화 절상되면?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파장1: 1980년대 후반 경험 반복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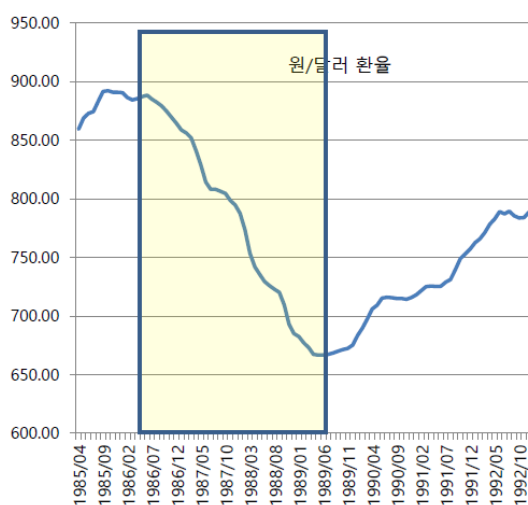


80년대 후반: 미국의 대일적자 해소 위한 플라자회담, 슈퍼 301조 발동 등 엔고전략에 한국도 희생양→원/엔 환율 하락: 1986년 첫 경상흑자 1990년에 적자로 다시 추락.

현재는 미국의 대중적자 해소 위한 환율 통상 압력, 다시 한국이 희생양 가능성 우려

80년대 슈퍼 301조의 파장의 경험

원화강세=> 처음 달성한 경상수지 적자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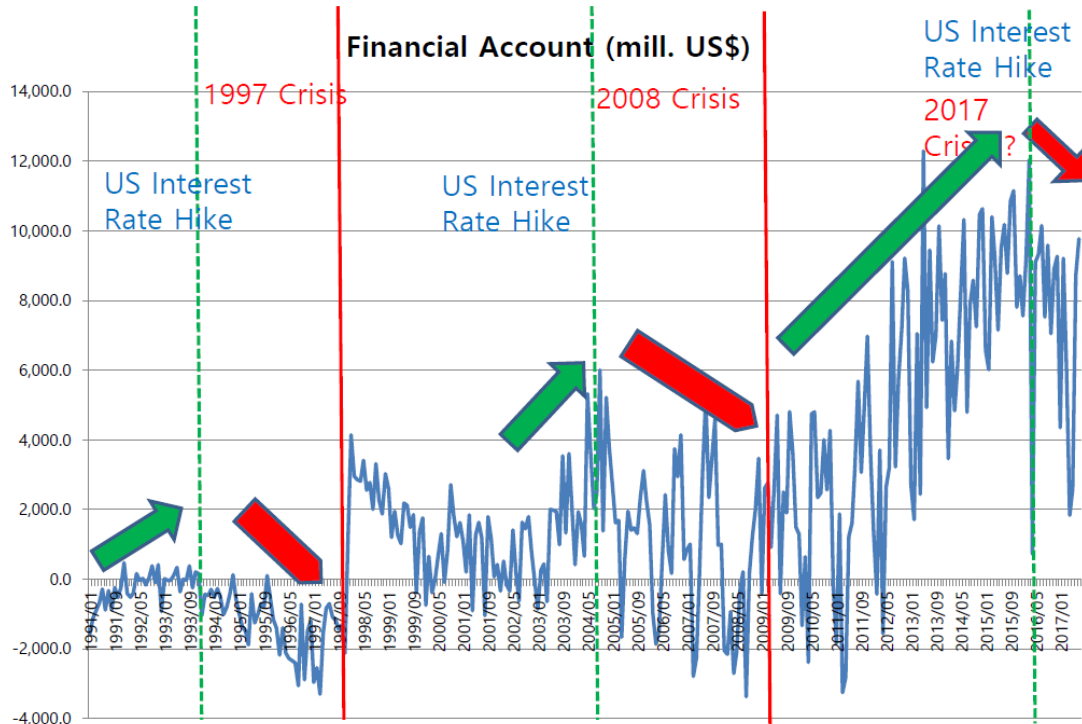


	경상수지(백만 달러)
1980	-6,845.00
1981	-6,421.90
1982	-5,542.10
1983	-3,505.60
1984	-1,755.80
1985	-2,079.30
1986	2,762.20
1987	8,827.70
1988	13,055.30
1989	4,154.50
1990	-2,403.60
1991	-7,604.60
1992	-2,431.70
1993	2,026.00
1994	-4,463.70
1995	-9,751.50
1996	-23,830.90
1997	-10,285.30
1998	40,056.90

파장 2 : 금융위기 재연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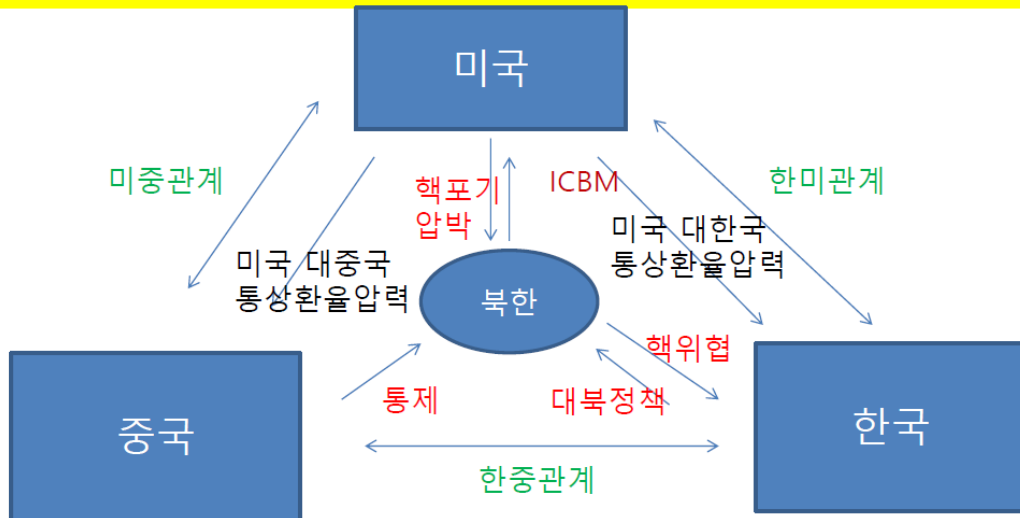
- 소규모개방경제국의 금융위기는 언제나 통화가치 고평가에서 시작
- 통화가치 고평가 → 수출 감소 → 가동률 하락 → 금융부실증가 → 금융위기 (은행위기, 외환위기)

1997 and 2008 위기 데자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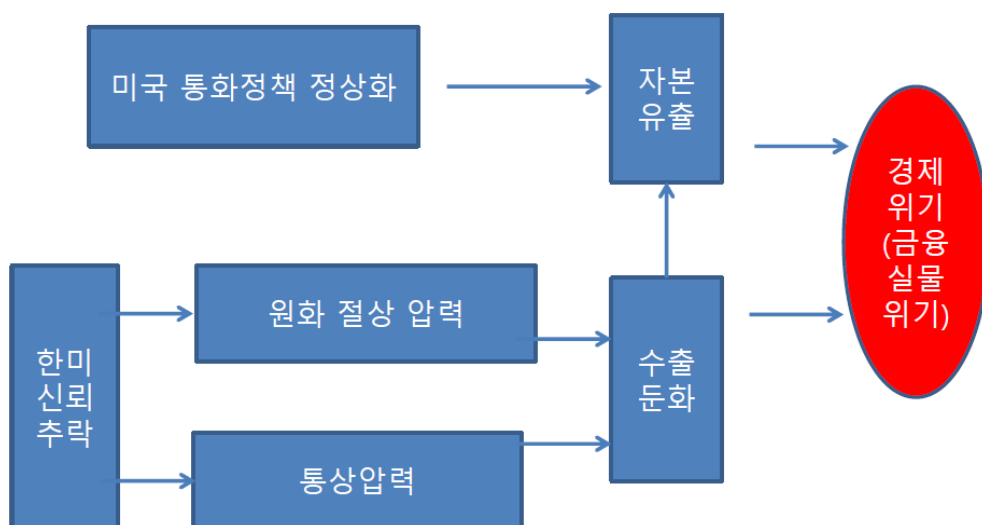
왜 한국에 미국의 환율 통상 압력 거세어지고 있나?

동북아정세와 통상환율압력



대북문제를 둘러싼 동맹국 한미간 신뢰회복을 토대로 대화와 이해증진을 통한 한미간 환율 통상 압력 해소 방안 모색해야?

한국 위기 재연?



새로운 시각

- 교환성 기축통화 대규모 개방경제 미국 vs 비교환성 비기축통화 소규모 개방경제 한국
- 외채 많은 한국의 외환보유액 필요성
- 적정환율=경상수지 제로 환율?

환율제도 재고

- 자유변동환율제도: 미국 한국 일본
- 관리변동환율제도: 중국 말련 태국
- 커런시보드제도: 홍콩
- BBC: 싱가포르
- 고정환율제도: 유로존
- 한국: 자유변동환율제도 적합?
- 돈부시 박영철: BBC

대응방향

- 대미 신뢰회복으로 환율 통상정책 운신폭 확대
- 통상 환율정책 전면 재고
- 투자활성화로 불황형 경상흑자폭 축소
- 외화유동성 확보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외화유동성 위기 대비
- 금리 추가 인상은 자본유출동향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추진
 - 과도한 금리인상 기업부실 가계부채원리금상환부담 가중으로 경기침체 초래

대응방향

- 한미일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대화채널 구축으로 대외발 금융불안 소지 제거
- 경상수지 흑자 발생시 공기업 대외채무 상환으로 종합수지 적정 수준 관리
- 2011년 파리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합의하고 이어 2012년 IMF도 기관견해로 인정한 '**자본이동관리원칙**'을 활용해 자본유출입 안정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illegible]



서울시 중구 통일로 86, 917호(순화동, 바비엡3차)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